

주민 문화발전소·이야기 길 만들고 정원산업 타운 조성

<광주 양림동>

<광주 농성동>

<순천 장전동>

광주·전남 도시재생뉴딜 선정지 사업 내용과 기대효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로 광주·전남지역 8곳이 선정된 것은 과거 정권의 무관심 탓에 ‘낙후의 대명사’가 된 이 지역의 대표 구도심을 새 단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설·토목 공사 중심의 구도심 개발이 아닌 지역성을 살리면서 문화가 결집어진 ‘도시 개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 속에서 도심을 재디자인할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됐다.

14일 광주시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선정은 사업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준비된 지역을 위주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모델로 삼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역사문화의 보고, 살고 싶은 양림’ 시범사업은 광주시 양림동(14만8590㎡)에 국비 등 654억여원을 들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벚꽃길 양림주민 문화발전소 등을 조성하고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마을기업 3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서구 농성동 일대에 조성되는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 시범사

광산구 도산동 100명 일자리 목포 유달동 주거 개선 기대 대표적 도심 재생사업들 탈락

업은 농성역 인근 5만5123㎡부지에 140억원을 들여 ‘벚꽃만개 미술관 가는 길’ ‘이야기 길’ 등을 조성하고 한옥카페와 공동작업장, 상상만개커뮤니티센터 등을 만든다. 이 일대의 벚꽃과 어우러진 ‘벚꽃행복주택’(공공임대)도 건립된다.

광산구 도산동의 ‘어르신이 가꾸는 마을, 꽃보다 도산’ 시범사업은 원도산마을 일원(5만4095㎡)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주거정비 사업이다. 주민이 거주하기 편한 복지마을을 만들고 집수리지원, 공공임대주택 건립, 골목길 정비사업 등이 결여된다. 광주시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인구 대비 20%의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순천만정원박람회 개최로 국내 유명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순천시 장전동 일대 20만966㎡에 7105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이 이뤄진다. 인근 순천만 국가정원과 연계해 정원 및 반려산업 타운이 조성되고 LH와 협업을 통해 청년주택, 임차인 보호 대안상가 등도 조성된다. 순천시는 이를 통해 이 지역 유

동인구가 올해 2만7000명에서 2022년 4만1000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만과 역 주변에서 급속한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목포시 또한 ‘1897 개항 문화거리’와 ‘보리 마당’ 시범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를 통해 목포항 개항 당시의 모습이 일부 남아 있는 목포시의 특성을 살리고, 유달동 일대의 주거지 형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목포시는 기대하고 있다.

반면, 도시의 대표적인 재생사업들이 이번 선정에서 빠진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한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토건설부 관계자들이 현장 답사를 하고 별도의 설명회가 진행되는 등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 공모에 뽑히지 못했다. 광주시와 남구청은 이 사업을 통해 백운광장 일대에 음식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한 원주민의 ‘동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주민 간 상생 협약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사업 대상지에서 선정되지 못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워크숍과 주민역량강화 교육,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 등을 보완해 내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2차 공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앞줄 왼쪽)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오른쪽) 대표가 14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 ‘청춘의 미래를 위한 부산’에 참석해 국민의당 경남도당 전 여성위원장이 선물한 목도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유승민 부산 회동 ‘통합 속도’ 反통합과 “통합 선언은 곧 분당 선언”

성탄절 이전 통합 선언설

국민의당 내분 긴장감 고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3일 광주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바른정당과의 선거 연대를 넘어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내 통합 반대파들은 14일 회동을 갖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속도 붙는 통합론=광주일보와 인터뷰 이후, 당내에서는 안 대표가 전국 민심 수렴을 끝내고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격적인 통합 선언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확산하고 있다. 안 대표는 14일 오전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송년회 행사에 참석 “그런 일정들을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양당 통합추진 모임인 국민통합포럼 행사에 함께 하는 등 ‘통합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양당 부산시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서 선거연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통합에 찬성하는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은 바른정당 지역위원장들과의 연석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안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결국 시간문제라는 모습이다. 강력한 제3지대 형성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라는 명분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당내 세력 상 당무위, 중앙위, 전당원투표는 물론 전당대회에서도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호남 의원들의 탈당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섭단체 구성이 쉽지 않은데다 ‘탈당’과 ‘호남’의 프레임에 갇히면서 정치적 입지 구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호남 탈당파 의원들을 선토크 받아들이는 보장도 없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선언은 분당선언=안 대표가 결국 통합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는 반 통합파 의원들의 위기감은 깊어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에 출연 “안 대표가 통합을 선언하면 분당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통합 반대파로 분류되는 평화개혁연대(평개연)와 당을 구하는 초선의원 모임(구당초)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의원 대다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합 절차를 진행할 경우,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통합 반대 진영에서는 최악의 경우, 분당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탈당 의원들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물론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합한다면 실질적인 원내 3당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혁을 지렛대 삼아 민주당과 수도권에서 선거 연대를 하고 호남에서 경쟁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개혁 노선과 인물론으로 승부한다면 호남 민심의 전략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받지 않는 통합은 시너지 효과가 없는데다 탈당은 곧 공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양측이 선거연대 선에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방위 5·18특별법 의결 무산 거센 후폭풍

“공정회 하자더나... 해외시찰”

민주당, 한국당 맹비난

5·18기념재단 유감성명

자유한국당 반대로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5·18 특별법안 이 한국당 반대로 국방위 의결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법안 발목 잡기”, “법안 미처리 뺑소니”라고 규정하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역시 “(법안 처리가) 결국 또 한 해를 넘기게 됐다”며 “37년간 미완의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일은 이제 여야,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라며 한국당의 행태에 일침을 날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회를 생각하기로 법안 소위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이뤘는데 한국당이 공정회를 핏

계로 법안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 잡기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공정회를 하자면서 법안처리를 무산시키고 한국당의 (국방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무책임하게 (하와이로) 해외시찰을 떠났다”며 “해외시찰 일정을 (먼저) 잡고 공정회를 주장하는 데는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내 처리를 기대하신 국민과 5·18유가족 및 5월 단체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송구스럽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실망이 크지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차기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그러나 이날도 “5·18진상조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당은 원내대변인 신보라 의원 명의 논평에서 “어제(13일)

국방위에서 5·18특별법 통과가 무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별대갈이 나서서 한 국당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한국당은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 국회법 절차도 준수할 것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은 적법 절차를 애기한 것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보류된 것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을 찾고 싶은 행방불명자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과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읽지 못한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아직까지도 가족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의 고통을 위로해줄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